

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8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1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이수진 · 박해철

박지혜 · 김 윤 · 박지원

노종면 · 윤종균 · 김예지

조계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,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‘인권 보호와 향상’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~3호

신설).

#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진정이 없는 경우에도”를 “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계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
3.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의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(위원회의 조사대상) ①· 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제1항의 <u>진정이 없는 경우에도</u>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	제30조(위원회의 조사대상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1. 「계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
<신설>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
<신설>	3.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참사의 경우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